

與野, 예산 증액심사에 '충돌'... 기한 내 통과 어려울 듯

與 '5대 위협 요소' 극복 사업 제시 대폭 삭감한 R&D, 재구조화 약속 野 '5대 미래·생활 예산' 내년 반영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복원할 것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및 여야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0일부터 5일간 656조 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고, 연구개발(R&D)·지역화폐 예산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항목이 많아 예산안 통과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간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부터 5일간 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17개 상임위 중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앞서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대폭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R&D 예산은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5대 미래예산(R&D, RE 100 대비)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생 대책 위한 보육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세대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각 당에서 민생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서로 이견이 큰 상황이라 상임위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면서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복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을 경계하고 있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증 예산의) 상당수는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증액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면서 R&D 예산,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증액을 했다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나라살림을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며 "국회 최고 의석수를 가진 만큼 민주당은 공당다운 자세로 돌아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상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뉴시티 특위, '행정통합 특별법' 준비... 지방 메가시티도 추진

통합 용이하도록 절차 간소화 김포 편입 유력... 고양시도 방문 요청 尹 정부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맞물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서울·부산·광주 메가시티 본격 추진을 위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한다. 다른 지역의 메가시티를 본격 추진하기 전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20일 회의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특별법은 통합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 인근 도시와 서울 편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데 구리, 하남 등 건건이 (특별법을 발의)하

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통합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지자체법을 상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향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조금 더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법

안이 나오면 그때 공개하겠다"고 했다.

향후 서울에 편입될 경기도 지역에 대한 질문에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김포는 유력하다. 김포시민들 찬성이 68%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에 대해서는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내일 고양시에 갈 것"이라며 "고양에서도 통합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뉴시티 특위는 부산·경남 메가시티, 대전 메가시티 등 수도권 외 지역 메가시티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24일엔 경남도를 방문하고, 조만간 대전이나 광주도 방문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오는 24일 부산·경남을 통합하는 첫 논의를 시작하고, 조만간 대전시도 방문해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수도권 메가시티와 지방 메가시티를 연이어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가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도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티 모델로는 "일본의 도교와 오사카, 나고야가 메가시티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서 "뉴욕, 파리, 베이징 이런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일부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당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당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르다"며 "우리가 하는 메가시티는 상향식인데 울산이 상당히 소극적이다. 부산·경남 통합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메가시티 정책이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경제관료 출신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경기도 같은 도시는 인구절벽 시대에 분할하기보다 통합시키는 것이 훨씬 더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우리는 야당처럼 공약해 놓고 안 지키는 거짓말 정당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 공약을 실천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野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 "명백한 잘못, 국민·당원께 사과"

프로젝트 행사 연기... 원점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치러지는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현수막이 청년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기획 의도가 어땠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0일 현수막 논란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의 불찰이고,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현수막은 민주당의 갤럭시 프로젝트를 사전 홍보하기 위한 티저(맛보기) 광고였

다"며 "갤럭시 프로젝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국민성을 담아내기 위해 준비한 프로젝트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티저 광고는 외부전문가의 과격적인 홍보 콘셉트를 담은 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실행 과정이 진행됐다"며 "또 론칭을 앞두고 주요 내용 비공개 등의 이유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과정에서 오해와 논란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에 프로젝트 소개를 위한 오는 23일 행사를 연기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더민주 갤

럭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프로젝트는 국민 개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나에게 쓸모 있는 민주당'으로 변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기하학적 무늬와 함께 '11.23 나에게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잖아 혼자 있고 싶잖아?'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 4종이 공개되며 당 안팎에서 청년 비하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지도부에서 "캠페인 준비를 하는 홍보사 같은 업체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꼬리 자르기' 논란도 일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與, 내년 1월까지 '국민 인재' 추천 받아

온라인·우편 접수 운영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펼 인재들 '국민 추천'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당 홈페이지에 특별 페이지를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국민 인재를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국민 인재 추천은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운영되며, 타인추천 및 본인추천 둘 다 가능하다.

인재영입위는 "활동기간 동안 국민 추천을 받은 인재들을 발굴, 영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꼼꼼하게 검증해 국민께 신뢰받는 정치, 희망 주는 정치로 보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입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영입 인재가 당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인재의 4대 영입원칙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재 ▲민익과 공익을 우선순위로 두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는 인재 ▲재기 능력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인재다.

/박정익 기자